

의안번호	제 37 호
의 결 연 월 일	2014년 9월 30일 (제 334 회)

**사회복지시설 ‘음성 꽃동네’
전액 국비지원 및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 안 자	정책복지위원장
제안연월일	2014년 9월 30일

사회복지시설 '음성 꽃동네' 전액 국비지원 및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7
----------	----

발의연월일 : 2014. 09. 30
발 의 자 : 정책복지위원장

□ 주 문

- 음성 꽃동네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전액 국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예산지원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건의안을 채택하려는 것임.

□ 제안이유

- 2005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가중과 함께 전국구 사회복지시설인 음성 꽃동네의 시설비·운영비에 투입되는 지속적인 지방비 부담액 증가로 인해 충북의 심각한 재정부담이 초래됨.

※ 꽃동네 지방비 부담액 : 16억원('04) > 112억원('14)

- 꽃동네 입소자 1,912명 중 실제 충북지역 주민은 19%에 불과하고, 81%가 타 시도에서 전입한 분들로, 시설이 충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외지인을 보살피는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입소자의 99%가 국가에 복지책임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별적 복지 관점에서도 전액 국비지원의 타당성이 확인됨.
- 상기 이유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조속한 꽃동네 전액 국비지원을 충청북도의회 명의로 건의하고자 함.

□ 보내는 곳

- 국회의장, 국회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시설 ‘음성 꽃동네’ 전액 국비지원 및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님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님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님

부모나 친인척들로부터 소외된 아이들, 노숙자, 행려병자, 다른 복지시설에서 입소를 꺼려하는 중증장애인과 노인 분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음성 꽃동네는 1976년부터 37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설로 회자되어 왔습니다.

지난 8월16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5일간의 짧은 한국 순방 중 공식 방문하셔서 입소자들과 축복의 시간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매년 자원 봉사자가 16만 명에 이르는 등 꽃동네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은 매우 뜨겁습니다.

그러나 정작 음성군민과 충북도민은 꽃동네를 애정의 눈길로 바라볼 수만은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충북도의회는 160만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사회복지시설인 음성 꽃동네의 전액 국비지원을 강력히 건의 드리며, 다음과 같이 국비지원의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26.6%로 전국 평균 44.8%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 시도 중 13위)

이렇듯 어려운 재정형편에, ‘꽃동네’의 시설비·운영비에 투입되는 충북의 지방비 부담액은 2004년 16억원(총 지원액의 30%)에서 올 해는 112억원(총 지원액의 44%)으로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재정 보전대책」에 따라 2015년부터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지만, ‘꽃동네’에 지원되는 지방비 부담 감소액은 18억원에 불과해 그 효과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2005년 사회복지 분야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면서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보전해 주기로 했지만, 분권교부세의 연평균 증가율은 8% 수준인 반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회복지 분야 사업의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14%로 그 차이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충북도와 음성군에서는 국가복지재정이 열악했던 70~80년대부터, 국가를 대신해 소외된 이웃을 보듬는 꽃동네에 예산을 꾸준히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꽃동네에 지원되는 지방비 부담액의 지속적인 증가는 음성군과 충북도의 심각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도민의 복지혜택 축소와 지역 간 복지서비스의 불균형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꽃동네에서 생활하고 있는 1,912명의 아동, 장애인, 노인, 부랑인 중 실제 충북지역 주민은 19%에 불과하고, 81%인 1,539명이 타 시·도에서 전입한 분들입니다.

즉, 시설이 충북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타 시·도의 재정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면서 충북도와 음성군이 소외된 외지인들을 보살피는데 적지 않은 재정 출혈을 감내하고 있는 셈입니다.

셋째, 꽃동네 입소자의 99%에 해당하는 1,897명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활과 복지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따라서, 꽃동네에 대한 지원을 열악한 지방재정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의 관점에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집중되어 생활하는 꽃동네에 대한 전액 국비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합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국회,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을 수 십 차례 방문하면서 꽃동네에 대한 국비지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지방이양 사업은 현행 법 상 전액 국비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즉, 전액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전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2년 새누리당 경대수의원은
적용대상이 지역주민에 국한되지 않아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기 어려운 사업은 예산의 전부를 국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새정치민주연합 오세세 의원도
같은 법인이 같은 장소에서 6개 이상의 사회복지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수용인원이 1천500명 이상이며, 수용인원의
70%이상이 타 시·도로부터 전입하였을 경우 전액 국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2년이 넘도록 국회 상임위 문턱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상임위 및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꽃동네 국비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님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님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80대 20인 현재 수준에서는 꽃동네와 같은 유형의 전국단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전액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열악한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지역 간 복지서비스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지방재정을 강화하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음성 꽃동네 전액 국비지원과 조속한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4년 9월 일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